

III. 최신 환경단신

◆ 환경인증 아파트 선보인다(내외경제신문 2/7)

아파트단지의 입지 및 주거환경을 종합평가해 등급을 매기는 아파트 환경인증제도가 이르면 하반기 중 도입된다. 특히 이 제도는 아파트사업승인시 심의 및 평가자료로 적극 활용되는데 이어 기존 아파트에까지 확대 적용될 예정이어서 주택수요층의 청약 및 기존 아파트 매입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7일 업계 및 관련기관에 따르면 지난 3년간 국책과제로 추진해 온 아파트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주택공사의 용역결과가 이달말 완료됨에 따라 상반기 중 시범인증 등 준비단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 인증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주택건설업체 및 소비자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법제화 또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미 12~13개 대형주택건설업체들이 용역기관인 주공 주택연구소에 시범 인증을 신청하는 아파트 환경인증제도에 대한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또 환경부가 내년 시행을 목표로 이와 유사한 ‘그린빌딩’제도 도입을 추진 중인만큼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련법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환경아파트란 설계·시공·운영·유지관리·폐기의 라이프사이클 속에서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는 물론 자연환경 보전능력을 갖춰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도록 계획된 아파트를 말한다.

이 제도는 아파트의 입지여건을 비롯 전기·수도·자재 등의 에너지 절약, 실내환경, 환경오염 저감 여부 등에 대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해 각각의 점수를 매긴 뒤 이를 등급화해 순위별로 인증서 및 엠블렘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환경아파트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등 4단계로 구분될 예정이며 최우수 등급의 경우 ‘최우수 환경친화아파트’라는 명칭과 이를 상징하는 엠블렘 4개, 우수 및 양호등급의 경우 ‘환경친화아파트’와 함께 점수에 따라 엠블렘 1~4개를 각각 부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단지과 도심·지역중심과의 거리, 지하철역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지역난방 시스템, 생활쓰레기 처리시설, 녹지공간을 및 녹지 연계여부, 가변형·주문형 평면개발 등 약 30가지의 기본항목(100점 만점)과 자연지형 보전, 택지개

발지구 내 입지, 정보통신망 구축 여부 등 보너스 항목(25점 만점)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평가기준에 따라 항목별로 최고점수가 2~6점으로 차등화될 예정이다.

주공 주택연구소의 이규인 책임연구원은 “건축물 환경인증제도가 이미 정착돼 있는 영국 등 외국의 경우 환경인증 등급에 따라 아파트 등 건축물의 투자가치가 결정되고 있다”며 “환경인증시 좋은 등급을 받을 경우 분양률을 높일 수 있는데다 입주자들도 환경쾌적성이 보다 높은 곳을 선호하는 등 주택건설업체나 소비자 모두에게 객관적인 지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향후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고 밝혔다.

◆ 2003년부터 오염배출업소 조업정지등 규제 엄격(세계일보 2/7)

화학물질이 섞인 오-폐수를 배출하는 비료공장 등 전국의 3700여 업소는 2003년부터 총질소-총인을 허용기준 이상 배출할 경우 조업정지 등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된다. 특히 앞으로 새로 짓는 공장 등 오염배출업소는 내년부터 총질소-총인의 배출 허용기준 대상에 포함된다.

환경부는 그동안 팔당-대청호와 낙동강 유역의 오염배출업소와 하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해서만 적용해오던 총질소-총인에 대한 배출 허용기준을 2001년부터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질소와 인은 하천에 흘러들 경우 식물 플랑크톤을 증식시켜 수질오염을 가속화하고 부(富)영양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 적조-녹조현상의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

청정지역에 소재한 오염배출업소의 허용기준은 총질소 30ppm이하, 총인 4ppm이하이며, 기타지역은 총질소 60ppm이하, 총인 8ppm이하로 각각 정해졌다.

상수원보호구역등 특별대책지역내의 하수종말처리장과 잠실수중보 상류지역에 하수를 흘려보내는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 총질소 20ppm이하, 총인 2ppm이하, 폐수종말처리장은 총질소 60ppm이하,총인 8ppm이하여야 한다.

환경부는 그 동안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화학적산소요구량(COD) 등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을 정해 오염업소를 규제해왔으며 총질소-총인은 팔당호 등 일부 상수원구역만을 대상으로 적용해왔다.

◆ 울산지역에 겨울철새 수천마리 날아들어 (매일경제신문 2000/2/8)

울들어 울산지역에 각종 겨울철새 수 천마리가 찾아 들면서 공해도시 오명을 벗겨

주고 있다. 울산시내를 가로질러 흐르는 태화강에는 요즘 천연기념물인 큰고니를 비롯해 청둥오리, 댕기물떼새, 논병아리, 딱새, 물총새 등 모두 15~18종의 철새 4000여 마리가 모여들어 겨울을 나고 있다.

울산석유화학공단에서 2km 가량 떨어진 남구 선암저수지에도 청둥오리 등 수백마리의 겨울철새가 날아들었고 울주군 외항강 하구에는 13년만에 천연기념물 황새 1쌍이 찾아들었다. 또 태화강 하구에는 여름철새인 왜가리 수십쌍이 돌아가지 않은 채 겨울을 나며 텃새화되고 있는 등 울산공단 인근의 하구연과 저수지가 철새들의 낙원으로 변하고 있다. 이처럼 울산지역에 철새들이 날아들고 있는 것은 최근 몇 년간 울산·온산공단 기업체들이 공해방지시설에 집중 투자하면서 이 지역의 수질과 대기가 크게 나아진 데다 태화강과 외항강 하구연에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갈대밭이 우거져 있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류연구가 김상만(울산시교육청 장학관)씨는 “그동안 도시개발에 따른 하구연의 환경파괴와 공단에서 내뿜는 각종 환경오염물질 등으로 철새들을 거의 볼 수 없었으나 최근 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많은 철새 들이 찾아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또 “갈대밭 보존과 먹이주기 등을 통해 울산을 철새들의 낙원으로 만들어 공해도시 오명을 벗기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 했다.

◆ 청정생산투자 지원자금 2005년까지 1조원 늘리기로 (한국경제신문 2000/2/11)

산업자원부는 청정생산투자 지원자금을 2005년 1조원까지 늘리고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를 구축하는등 환경친화적 산업발전 3개년 계획을 수립,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산자부는 우선 산업은행등을 통해 지원되는 청정생산 설비투자자금을 올해 3천2백억원에서 2005년 1조원까지 확대기로 했다.

도요타와 소니 등 외국기업의 청정생산방식을 벤치마킹해 자동차와 전자 석유화학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청정생산비전을 제시하고 세부기술과제를 발굴, 지원키로 했다. 또 다이옥신제거기술 이산화탄소저감기술 등 미래 유망환경설비기술을 선도적으로 개발하는 한편 우수 국산설비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해 시장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자원순환형 산업구조 구축을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단지(Eco Industrial Complex)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원료조달과 제조 등 산업의 전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성을 평가하는 기법과 환경친화적 제품설계 등 선진환경경영기법을 개발, 보급키로 했다고 산자부는 밝혔다.

산자부는 국내 주력산업의 청정생산기술 수준은 선진국 대비 20-70%에 불과하며

환경경영체제(ISO 14001)인증을 획득한 기업의 비율도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재훈 산업정책국장은 “반도체 산업의 경우 환경비용이 제조원가의 10%를 차지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이 마케팅의 주요 관건이 되는 등 환경문제가 기업경쟁력의 새로운 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환경산업의 세계시장규모가 이미 제약산업과 항공산업을 능가해 2005년에는 5천5백40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생태-피해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ENS News 2000/2/11)

환경 피해에 엄격한 책임을 지우는 미래의 유럽연합 제도가 산업 경쟁력을 해치지 않는 것이라고 환경 위원장 Margot Wallstrom은 말하고 있다. 지난 목요일 (2월 10일) 정책 문서를 발표하면서 그 장관은 내년 하반기에는 그 제도를 실행할 법이 제출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미국과는 달리 소급 효력을 갖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상업 부문에 편향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은 자동차 재활용에 대한 제조자의 책임을 소급 적용하고 있는 현재의 안과는 뚜렷이 대비된다. 그 책임 제도는 사고로 생긴 피해 책임자들로부터 정확한 보상을 얻어내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다.

그 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에 대한 피해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규정은 유럽 연합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나투라 (Natura) 2000 네트워크에 속해 있는 야생동물 보호지에 한정된다.

그 정책 문서에 따르면 유럽 연합 법으로 규제 받고 있는 모든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위험한 활동은 그 책임 제도하게 있게 될 것이다. 여기에는 농약 사용, 몇 가지 유전조작작물 재배가 될 것이다. 유독한 물질을 배출하는 모든 과정이 그 제도로 규제될 것이다. 위험하지 않더라도 나투라 2000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 역시 포함된다. 나투라 2000 지역에서 환경, 건강, 생물다양성에 피해를 입힌 경우 ‘운영자들 (operators)’은 자신들이 잘못이 있든 없든 간에 오염 정화 비용을 엄격히 물어야 한다. 여기서 “운영자들”이란 각 활동별로 정의된 것으로서 여러 부분이 포함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에리카 유출과 비슷한 사건에서 선박회사와 유조선 및 화물선 소유자들은 정화 비용을 분담해야한다.

중요한 점은 생물다양성이 피해를 입으면 원래대로 복구해야하고, 오염 장소는 실제 사용에 맞는 정도로 정화해야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용-이익 분석을 해야하고 부과된 비용이 합리적인지를 보증해야한다. 피해를 입증할 원고 측의 의무가 많이 줄어

들었지만 그렇다고 모든 증거 입증 책임이 피고인에게 완전히 떠 넘겨진 것은 아니다. 그 제도로 규제되는 활동에 종사하는 측이 반드시 위임 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린/EFA 단체에 속해 있는 유럽 의회 회원들은 그 백서를 맹렬히 공격했다. 빠져나갈 구멍이 너무 많은 데다 중요한 질문들이 여전히 너무 모호하다는 것이었다. 증거 입증 의무를 체계적으로 역전시키지 못한 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은 말했다.

24개국 135 회원 기구로 구성된 환경 연합체인 유럽환경국 (EEB: European Environmental Bureau)은 이번 문서가 이전 초안보다 너무 희석되어 그 안에서 남은 유일한 강력한 기둥이란 엄격한 책임성에 대한 주장밖에 없다고 말했다. EEB 실행위원장 John Hontelez는 백서를 통과시키려면 환경위원회가 기업, 지역 개발, 농업 분야의 동료들이 가하는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것은 암스테르담 조약에서 모든 경제 부문에서 환경 정책 통합을 실현하자고 명기되어 있는 유럽의 의무에 분명히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EB는 그 책임 정책이 증거 입증의 의무를 역전시켜서 원고에 대한 증거 입증의 부담을 줄였고, 정의 혹은 강제 보험에 접근하지 않는다는 점을 비판하고 있다. 그 연합은 피해 범위가 무제한 적인 것은 아니지만 비용-이익 분석에 근거하고 있고, 생물 다양성에 대한 피해가 단지 심각할 때로 한정하고 있는데 심각하다는 것에 대한 정의도 내리지 않고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EB는 그 체제가 환경 책임 범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환경 법령이 미치지 못한 활동을 풀어주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기업-제품에 환경점수 매긴다 - 환경부 올 업무계획 (동아일보, 2000/2/17)

환경부는 농어촌 지역 상수도 시설 확대 사업에 2005년까지 4892억원을 투입해 상수도 보급률을 현재의 25%에서 55%로 높이기로 했다. 또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하나로 연말까지 취수원 다변화와 오염총량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고 9월 말까지 금강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 특별대책을 수립키로 했으며 금강 영산강 ‘수계관리특별법’도 하반기 중 제정할 방침이다.

김명자(金明子)환경부장관은 17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면서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생활양식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품의 환경영향 정도를 표시하는 ‘환경성적 표시제도’를 도입하고 친환경적 기업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의 환경성과 평가 체계’를 개발 보급한다는 것.

김장관은 특히 플라스틱 포장재와 가전제품 등 폐기물 다량 발생 제품의 생산자가 의무적으로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를 도입해 생산자에게 재활용 목표율을 부과하고 의무이행 여부를 감독하겠다고 보고했다.

환경부는 이밖에 가뭄과 수질오염 등으로 식수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산간계곡 등 60곳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식수전용 저수지’ 건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생산자책임 재활용제’ 내년 가전제품 시범실시 (매일경제신문 2000/2/18)

생산업체에 폐기물 재활용 의무화 - 2002년 대상품목 확대

환경부는 폐기물 발생을 생산단계부터 줄이고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를 내년에 가전제품을 대상으로 시범실시하고 2002년부터 전 대상품목으로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김명자 환경부 장관은 이날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폐기물의 감량·자원화 촉진을 위해 제품의 설계·생산단계부터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올해 관련법을 개정해 내년에는 가전제품에 대해 시범실시한 뒤 2002년부터 확대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내년에 적용될 품목은 TV,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이며 2002년부터는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포장용기와 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등으로 확대 적용된다.

‘생산자책임 재활용제’란 플라스틱 포장재, 가전제품 등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는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재활용 가능성을 감안해 품목별로 재활용 목표율을 결정하면 생산자는 단체를 구성해 이를 달성하거나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에 예치해야 한다.

정부는 이번 제도가 실시되면 현재 포장용기·가전제품 등에 부과하고 있는 예치금을 생산업체에게 돌려주고 이 자금을 이용해 생산단계부터 생산자책임하에 재활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가 도입돼도 최종제품가격 인상효과는 크게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폐기물 실처리비용의 30~50%를 생산업체에게 예치금으로 부과, 지난해에는 200억원 가량을 거뒀다.

홍준석 폐기물정책과장은 이와 관련해 “생산업체의 부담을 감안해 중소기업에게는 차등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